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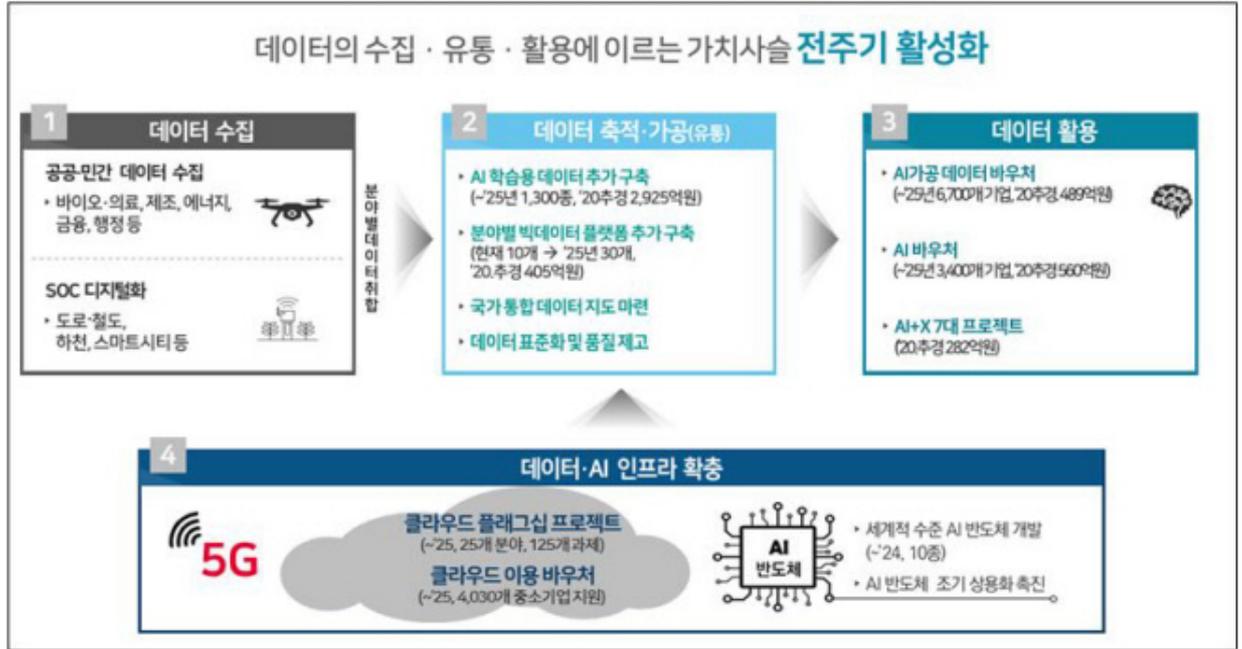
경향비즈

'데이터 댐' 사업 출발...2만8000개 일자리 창출 기대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2020-09-02 10:35 입력 | 2020-09-02 14:16 수정

< 데이터 댐 7개 사업의 연계 구성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디지털 뉴딜' 정책의 핵심 사업인 '데이터 댐'(데이터 활용 신사업)이 가동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2만8000여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인공지능(AI) 활용이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댐 사업의 7개 과제를 수행할 기업·기관 2103곳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데이터 댐은 공공·민간 데이터를 수집·가공해 산업 전반에 활용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2025년까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58조여원을 투입해 90만여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지난 7월 정부가 밝힌 디지털 뉴딜의 일환이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AI가 학습할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예산 2926억원)에 584개의 기업·기관이 선정됐다. 서울대·카이스트 등 37개 대학산학협력단과 서울대병원·국립암센터 등 21개 병원이 참여했다. AI가 학습할 한국어 말뭉치(Corpus), 농작물 병해충 이미지, 암질환 영상 등 텍스트 7억 권과 음성 6만 시간, 영상 1만5000 시간 등의 데이터를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이 AI를 도입하도록 기업당 최대 3억원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560억원)에는 209개의 수요기업과 155개 공급 기업이 선정됐다. 수요기업에는 섬유 등 전통제조 업체와 병원, 투자운용사, 관세·특허·법률기업 등이 포함됐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AI 학습용 데이터로 전환하는 AI 데이터 가공 바우처 사업(480억원)에는 620개의 기업이 참여했다. 여러 기업들이 통합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플래그십 사업(250억원)에는 4개의 플랫폼 개발 과제와 62개 서비스 개발 과제가 선정됐다.

이밖에 AI의 개발과 활용을 지원하는 AI 융합프로젝트(282억원)에는 16개 기업이 선정됐다. 중소기업의 업무환경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클라우드 이용 바우처 사업(80억원)에는 337개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405억원)에 따라 5개 플랫폼과 50개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데이터 댐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당초 기대보다 4000여명 늘어난 2만8000여명으로 추산됐다"며 "데이터 수요 기업 중 ICT기업이 아닌 비율이 크게 느는 등 데이터 활용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 향후계획(후속 조치사항) >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데이터를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데이터 구축 공통 가이드라인 적용(20.추경) • AI 학습용 데이터 간 호환성 확보	품질관리 체계 강화 • 정량적 품질평가지표 도입, 활용기업이 참여하는 품질평가자문단 등	빅데이터 거래소 연구 • 데이터 거래 원칙과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
디지털 전문계약 제도 도입	전통적 상품 조달 체계 → 디지털 서비스 이용 체계 도입		
	디지털 전문계약 제도 시행 (20.10월) •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 적용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 설치(20.10월) • 공공에 적합한 서비스 선정(과기정통부)	목록 시스템 구축 운영(20.10월) • 디지털 서비스 등록, 사후관리 등
AI 법제·윤리 기반 마련	경제·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합한 법제도·윤리 기반 마련		
	AI 분야 법제도 개선 로드맵 마련 (20.11월점정) • AI 법제 정비단 구성·운영 • 규제개선 사항 발굴	AI 윤리 기준 마련 추진(20.12월) • 주요국, 국제기구 등의 AI 윤리규범 비교 분석 등	지능정보 기본 법제 완비 (20.12월 시행) • 지능정보화기본법 및 하위법령 마련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자율주행·의료 등 산업별 AI 학습용 데이터 표준안을 개발해 데이터의 표준화 작업을 진행한다. 다음 달에는 AI·블록체인·사물인터넷(IoT)이 결합된 클라우드의 공공입찰 절차를 간소화하며, 11월에는 AI 분야 법제도 개선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